

## 비정규직 정책의 방향성

김근주\*

현 정부는 ‘노동’이라는 범주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여 왔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방향성에 관해서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다.<sup>1)</sup>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요약하면, ①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②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③ 사내하도급·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④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대변기능 강화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위한 비정규직 법·제도의 개선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큰 틀에서는 그간 축적되어 왔던 비정규직 연구들이 현실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현실에서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비정규직을 둘러싼 학술적·실무적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안들은 이미 상당 부분 축적되어 있다. 다만 정책적 수용 가능성이 높은 현시점에서 기존의 대안들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이미 제시된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논의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분석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특집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sup>2)</sup> 먼저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최근 정책적으로 가장 이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keunju@kli.re.kr).

- 1)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 10. 8),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일자리 질 개선>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 2) 이번 특집에서 소개되는 의견들은 작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한 포럼을 바탕으로 2018년 1월 출판된 자료집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의 일부분을 수정·요약한 것이다. 참고로 『비정규직 대책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고용형태(또는 고용구조)에 따라 구분하여 기간제근로자(조임영), 단시간근로자(박귀천·박은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박은정), 하청근로자로 나누어서 논의하였는데, 이 가운

수가 되고 있는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조임영 교수는 대표적인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국가인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한을 한정적 열거의 방식으로 ① 일시적 결원 근로자 등의 대체, ② 노동력 수요의 변동, ③ 업무의 성질에 따른 필요, ④ 정책적 필요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단시간근로자에 관하여 박귀천 교수는 최근의 비정규직 정책과 연구에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논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초단시간근로자 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서의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자 문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중심으로 한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문제에 대해서 박은정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포섭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단적 및 개별적 노동법제의 적용과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내하청 노동관계에 관하여 강성태 교수는 사내하청관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과건과 도급 구별 기준’ 입법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존의 계약 책임주의에서 능력 책임주의로의 전환을 통하여 간접고용의 사용자 책임 원칙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sup>

이러한 내용들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대책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현상에 치우치기보다는 근본적인 방향성 전환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비정규직 정책이 수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비정규직 대책이 전반적인 정책적 방향성과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비정규직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KL**

대 원하청 문제에 관해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의 원하청 문제 일반에 관한 문제(정영훈)와 사내하청의 규율 방안(강성태)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정부의 첫 번째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관한 현황과 과제(조상균) 부분을 추가하였다.

- 3) 강성태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능력 책임주의란 해당 노무공급관계를 주도하고 그럼으로써 역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법이 예정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